

.....

2 국토연구원

.....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100%	S
90% 이상 ~ 100% 미만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50% 이상 ~ 60% 미만	E
50% 미만	F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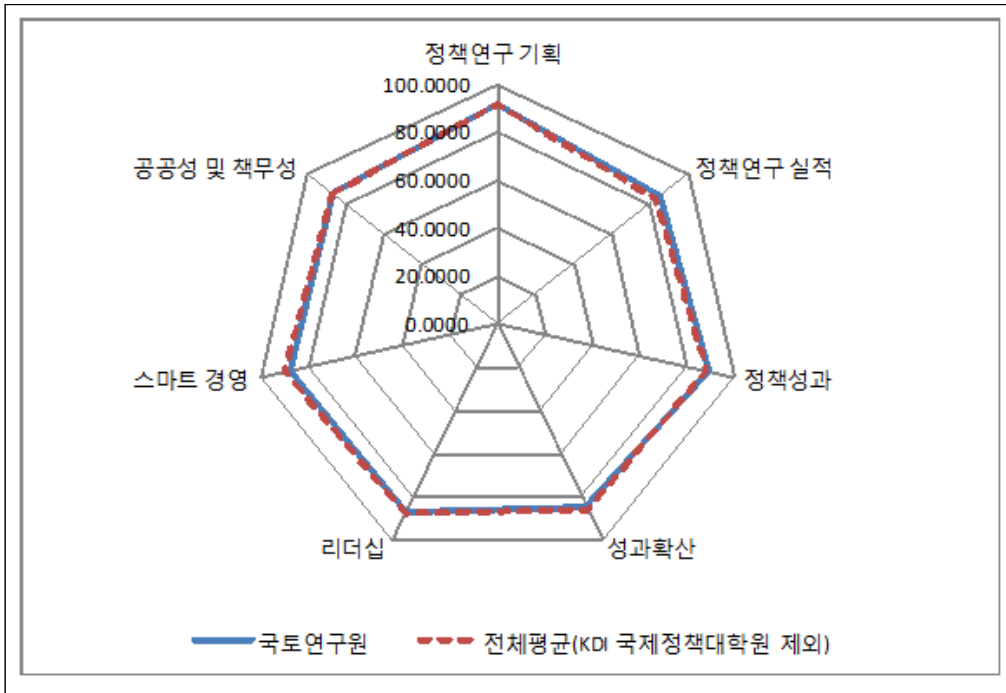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정책연구 기획 (기관단위)	1-1-1. 정책연구 기획 및 전략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 기획 및 전략의 우수성	① 정책연구 기획의 전략성	A
			② 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A
			③ 협동, 융·복합연구 발굴·선정의 우수성	B
	1-1-2. 정책연구 질 관리	<input type="checkbox"/> 연구 질 관리 수행체계 구축 및 운영 정도	① 연구과제 수행체계	A
② 협동 및 융·복합연구 수행(주관, 협력) 노력			B	
		③ 정부정책과제(국정과제)의 정책연구 수행 결과 정도	A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A	
1-2. 정책연구 실적	1-2-1. 정책연구실적의 우수성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연구 실적의 우수성	B	
1-3. 정책성과	1-3-1. 정책화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1-3-2. 정책집행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1-4. 성과 확산	1-4-1. 성과확산 및 네트워킹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 성과 및 정책 확산 노력과 실적	B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의 대내외 소통, 협업 및 융·복합	B	
	1-4-2. 고객만족도	<input type="checkbox"/> 정부 및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리더십	2-1-1. 리더십 및 책임경영	<input type="checkbox"/> 리더십 및 책임경영 이행 정도	① 경영전략 목표 및 소통·협업	B
			② 책임경영	B
			③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자율지표 3개)	B
2-2 스마트 경영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input type="checkbox"/> 조직·인사 및 보안관리	①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 노력 및 성과	B
			② 역량 개발, 인사관리 개선 및 노사화합	B
			③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B
	2-2-2 보수 및 예산운용	<input type="checkbox"/> 보수체계 및 예산운용	① 총인건비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S
			② 보수제도의 합리성	A
			③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운용 혁신	A
2-3 공공성 및 책무성	2-3-1. 사회적 포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포용 이행 정도	① 사회적 고용(장애인, 국가유공자)	C
			② 휴가 및 일·가정 양립지원	A
			③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고용 개선	A
	2-3-2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input type="checkbox"/> 내·외부 감사결과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①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②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실적 및 환류	B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분야]

- 다양하고 균형있는 내부 연구기획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 강화, 환류체계 구축, 사업계획 유지·관리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국정과제, 민생현안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원의 특성상 타 기관에 비하여 연구기획 및 관리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나,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통하여 원만하게 대처해 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연구 강화, 수시과제관리, 외부 자문위원 풀 관리 등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인 내부 규정 등의 정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함.
- 대부분의 연구과제들이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의성, 참신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함. 특히 향후 국토정책의 큰 방향을 선도하는 안목이 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큰 장점임. 주요 핵심과제들이 그동안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의 제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제안들이 정부의 투자 활성화대책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됨. 다만 향후에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 수행에 소요되는 정부예산 규모를 동시에 추정하여 제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연구보고서 배포처 12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배포방법 및 종류, 배포대상 범위 등을 정비한 점과 실무협의회를 다수 개최한 점이 우수함. 100대 국정과제 중 국토, 도시, 지역, 부동산, 인프라, 국토정보분석 등 9개 국정과제에 대해 정부부처와 협업체제를 형성함.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 유관부처와 협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기초자료 제공 등의 성과를 달성함. 지역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신규 MOU 체결과 기존 협력기관별 실질적 후속사업 및 연구연계를 통해 MOU 내실화를 추구함.

[경영분야]

- 기관장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활동을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였으며, 타 기관과의 협업 연구수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조직의 체계화와 홍보활동, 내부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 우수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의 역량 강화와 포상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어 적절함.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우수한 편에 속하며, 청렴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바람직함.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연구결과와 국민의 인식간 온도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및 국민적 인식 확대, 연구성과에 대한 환류 노력은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추진 정책의 과거 유관 정책과의 체계적 비교를 통한 정책내용 내실화 노력도 경주되어야 함.
- 기관 및 기관장은 과학적 국토정책 연구 수행기반 강화를 실천계획으로 설정해 노력하였음. 과거 30년간 기관의 센터별 대내외 활동을 코드화하고 DB화했으며, 통일 대비 국토 연구를 심화하였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 확대 방안을 연구하였음. 발전기획위원회 신설과 인트라넷 이용을 통해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협동 및 융복합 연구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음. 정부정책 기여를 위한 기관장의 활동도 전년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적절히 이루어졌음. 여성가족부의 미래여성인재양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음.
- 연구원 소식지 DB화를 통한 소통활성화 및 연구실행력 제고, 지역인재 채용 및 활용의 증가, 연구직과 행정직 상호간 서비스 만족도 우수직원 포상을 통한 협력적 조직문화구축, 우수보고서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구성원 사기 진작, <KHRIS 소통강화 프로그램> 활

용을 통한 노사협력 증진 및 소통활성화 등은 조직 및 인사관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양호한 노력으로 평가됨. 그러나 조직성과관리의 체계성 부족, 채용 시 외부심사위원의 낮은 비중,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및 근태관리의 부족, 융복합 연구 활성화 및 실적 미진, 노사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실행력 부족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함.

- 정보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당해 연도 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며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정보보안교육 참석률이 타 기관 대비 현저히 저조함에 따라 향후 보안교육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총인건비 규모 및 인상률, 결산잉여금 처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이 적정함.
- 기관은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 및 규정이 정부 권고안 및 연구회 지침에 따라 완료되었으며, 신규채용자의 소요 재원은 임금피크 대상자 임금절감분 및 인건비 집행 잔액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하였음. 다만, 연구원 공로자 우대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리와 복무인사관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수하고 있음. 기본연구사업비, 중점연구사업비 등 연구과제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수시사업연구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산 절감 및 예산 운용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력함으로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휴가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하여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각 제도별로 사용실적도 우수함. 청년인턴에 대해 기관에 특화된 교육과 멘토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턴수료자에 대한 우대조치도 마련되어 있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금수준은 여전히 차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외부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특히,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외활동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통제를 강화하였음. 감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감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음. 또한, 연구원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음. 자체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프로세스 및 환류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I

연구 분야

1-1

정책연구 기획

1-1-1. 정책연구 기획 및 전략

□ 정책연구 기획 및 전략의 우수성

① 정책연구 기획의 전략성

<장 점>

- 정책연구기획 TF, 실무협의회, 연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균형있게 내·외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됨. 자문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일상적 연구주체의 발굴과 함께 정책연구기획 TF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됨.
- 학계 공무원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기획 TF를 새롭게 운영함.

<단 점>

- 연구원의 사명이나 비전이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다만, 너무 긴급하고 잦은 요청은 연구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한 요청을 수용하는 절차와 기준에서 연구원의 내부적 기준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정책연구기획 TF 등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기획의 전략성을 높이려고 하였으나, 실제 TF 운영이 연 1회에 불과하여 TF로서의 역할은 다소 약하였다고 판단됨.
- TF 구성은 매년 같은 형식으로 선정하고 있어 차별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본부장과 센터장 회의는 일상적인 것으로서 TF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즉, 정책연구기획 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자문위원회 간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함.
- 열린마당, 토론방에 의한 의견수렴 방식 등 소위 상향식 기반의 과제발굴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 다소 소극적인 수준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일반 국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참여적, 개방적 방식의 연구주체의 발굴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개발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② 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

<장 점>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과제제안 초기부터 유사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조사 지원하는 ‘프로젝트 서포터즈(Project Supporters)’ 제도를 신설·강화함으로써 중복연구 방지를 강화한 것은 높게 평가됨.
- 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상향식은 물론 하향식 과정을 균형있게 사용함.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수시과제 발굴을 위해 정기발굴, 긴급발굴이라는 이원화제도를 통하여 정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고, 부처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제안서평가를 생략하고 원내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긴급발굴제도를 운영함.

<단 점>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전반적으로 과제 성격과 무관하게 과제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거의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요도와 성격에 따른 탄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
- 외부위원 참여폭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중심으로 구성되어 외부의 참여폭이 적은 만큼 보다 전국적인 전문가 풀의 활용이 필요함.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수시연구과제가 지나치게 과다함(54개). 수시과제 54개 중 18개(33.3%) 과제의 경우, 예산규모는 다르지만 연구기간('17.10.1-'18.3.31)이 동일함. 이 점은 동 과제들은 수시과제라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기본연구과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차별성 부각 및 대응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융·복합 과제의 비중이 다소 낮음. 기본과제라도 융·복합으로 추진하는 실적이 필요함.
- 보다 다양한 외부전문가풀 활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강구가 필요함. 즉, 세종시 소재 연구기관과 지역대학 전문가에 국한됨.
- 기본연구과제의 선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현재는 광의적 개념으로 선정 사유를 제시하였고 어떤 과제는 여러 개의 선정사유가 단순한 사유로 제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체 판단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수시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 수시과제의 성격에 맞는 과제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설정이 필요함. 타 기관에 비해서 수시과제가 54개로 지나치게 많은 점은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연구진 규모를 생각하여 수시연구과제의 연간 최대과제 수 설정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수시과제의 경우 일부 동일한 분야의 Fragmentation Project가 많은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재생의 경우 약 8개 이상이 수시과제로 진행되어 단편적인 것보다 하나의 통합적 연구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연구로 인한 잉여금의 처리로 인해서 과제수가 많아졌다면 이는 연구회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창출이 필요할 것임.

③ 협동, 융·복합연구 발굴·선정의 우수성

<장 점>

- 협동 및 융·복합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업무수행에 행·재정적 지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개정함.
- 다양한 기관 및 대학과의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단 점>

- 연구원의 규모로 보아 국민 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 및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도시, 교통, 환경 등)에 비해 전체 연구비 대비 협동 및 융·복합 연구 비중이 다소 낮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보고서에는 융·복합연구의 선정과제가 3건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연구원이 융·복합 연구에 대하여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음. 추후 소명에서 융·복합연구가 5건이라 하였는데, 협력기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 및 융·복합 연구과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상향식 외에 연구원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하향식(Top-down) 협동 및 융·복합 연구과제 발굴이 필요함.
- (가칭)융·복합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동 및 융·복합 연구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하향식 융·복합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권고함.
- 다른 연구기관과 차별적인 국토연구원만의 협동 및 융·복합 연구를 위해 주제 선정에 앞서 일단 다른 영역과의 공동연구 가능 부분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TF 구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협동 및 융·복합 연구 과제에 적합한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홍보, 장려책 마련이 요구됨. 연구원 내부의 협동과제 발굴은 물론 자체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무엇보다 과제수와 연구비의 획일성을 줄이고 다양성과 융·복합에 기반한 국민 체감형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1-1-2. 정책연구 질 관리

□ 연구 질 관리 수행체계 구축 및 운영 정도

① 연구과제 수행체계

<장 점>

- 연구심의회는 평가결과를 세분화(통과, 조건부통과, 보완심, 재심의)하고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있음.
- 사업계획 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건수가 전년 36건에서 1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함.
- 외부전문가 원고에 대한 검수기준 강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TF의 구성 등이 연구원 내 세부분야별로 균형잡혀 있음.

<단 점>

- 수시연구과제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평가 시스템이 부재함. 수시과제의 개수, 금액,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고, 개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는 많으나 자문 등에 참여한 전문가의 수와 범위는 다소 제한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과제의 개수, 유형, 범위가 많고, 복잡하며 다소 방만한 경향이 있음. 수시과제선정에 대한 수시연구과제 수행/관리/평가 기준 마련이 요구됨.
- <연구심의회> 외부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전문가 이외에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부처 공무원의 비율이 다소 높음.
- 수시과제 평가체계 및 평가반영에 대해 일반과제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연구의 성격과 기간 그리고 비용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② 협동 및 융·복합연구 수행(주관, 참여) 노력

<장 점>

- 연구업무수행규정과 연구업무수행규칙을 개정하여 협동 및 융·복합연구 질 제고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협동 및 융·복합 연구를 위한 다양한 협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성과제고를 위한 포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전체 협동 연구 40건 중 37건의 연구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단 점>

- 근거규정 및 지원제도에 비하여, 협동연구과제 수는 전체 연구과제 대비 23%, 연구비 기준으로 29%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마련이 다소 필요함.
- 협업연구네트워크 운용제도는 충분하나 실제 운용성고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인프라를 다루는 연구기관의 속성상 융·복합의 제약이 크나 보다 적극적으로 인문사

회, 경제경영, 공학분야 등과의 융·복합연구를 시도해야 함. 토지정책은 부동산정책으로, 주택정책은 금융정책으로, 교통인프라 정책은 IT 및 스마트도시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연구원이 선도해갈 수 있는 융·복합 연구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함. 연구기관마다의 특성이 뚜렷하여 획일적으로 융·복합연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기관에 비하여 융·복합연구의 범위와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남.

- 연구원 내부 인력간의 공동 및 협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KRIHS 연구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그러나 참여율이 16%에 그치고 있어 향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현재의 다각적인 연구네트워크가 융·복합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협동 및 융·복합 연구과제의 성격에 알맞는 기획과 연구기관간의 역할분담 등을 통해 실제적인 협력과 협업이 요구됨.
- 협업 및 융·복합과제에 대한 예산지원확대 등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현재 융·복합과제의 평균예산이 일반과제보다 113%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상향조정 필요).

③ 정부정책과제(국정과제)의 정책연구 수행 결과 정도

<장 점>

-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도모하였으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조직/인력/예산 배분을 통한 강화 노력이 우수함.
- 다양한 수시과제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정부정책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 관련 법 및 제도 개정 및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단 점>

-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과제가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론 및 현안에 대한 파악이 다소 부족함.
- 수시과제의 대부분이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연구원에서 발굴한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자체 발굴 기반의 세심한 선정이 필요함.
- 아울러 정부정책과제의 경우 국토교통부에만 국한되어 다양한 부처의 정부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 특히 민생현안과제 대한 연구원 자체발굴과정과 관련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연구과제의 결과가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예를 들어 법안 발의, 정책/제도 신설 등) 여부 또는 정책수요자의 만족도의 변화 혹은 관련 이슈의 언론 노출 횟수 등 정량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발굴이 필요함.
- 연구원이 수행중인 사업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민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 주제 및 정책 수요의 발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1-2

정책연구 실적

1-2-1. 국가정책연구 실적의 우수성

□ 국가정책연구 실적의 우수성

<장 점>

- 연구 주제의 시기적 적실성이 높으며,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력과 반응성이 높게 기획되었음.
- 연구 방법으로 사례연구, 영향분석방법, 시나리오분석, 지수접근법, 시스템접근법 등 다양한 분석방법이 활용되어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 연구 내용은 기술체계성이 높고, 실증적 자료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가독성이 좋음.
- 연구 결과는 정책대안의 적실성이 높아 대안의 실현가능성이 높음. 특히 기후변화나 주택담보대출정책 연구 등은 정책적 대안의 실현가능성이 높음.

<단 점>

- 연구 주제가 시의성이 높기는 하나, 다양성과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제의 참신성이 부족함.
- 연구 방법에서 범위설정에 관한 문제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거나, 공간연구의 경우 전 국토를 범위로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한정시킴으로서 연구의 타당도를 저하시킴. 이와 함께 연구의 방법과 대상이 지닌 한계로 공유모빌리티나 기후변화 연구에서는 효과분석의 취약점이 드러났으며, 공간구조의 연구에서도 지표의 한계로 연

구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는 문제가 노정됨.

- 연구 내용은 일부 연구에서 편제구성상 바람직한 분량조정이 이루어지 못해 충분한 문헌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협업연구로 진행된 우드로 윌슨센터와의 연구 결과도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연구내용의 적실성이 약화되었음.
- 연구 결과는 일부 연구에서 정책대안이 연구의 범위나 분석방법이 지닌 한계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 주제는 다양성과 차별성을 높이고, 협업연구의 경우 연구기획단계에서 세심한 조사절차와 내용구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방법은 분석방법의 다양성과 심층성을 보완하고, 기존 연구결과물들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폭넓게 활용해 내용의 충실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연구내용과 분석 대상이 상충하지 않도록 분석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설정해야 함.
- 연구 내용은 이론적 구성을 포함해 외국의 관련이론들이나 기존 연구결과물들을 폭넓게 활용해야 하며, 기술과정에서 적절한 분량 조정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연구 결과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대안의 고려 시에 인문사회적 특성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1-3

정책 성과

1-3-1. 정책화 기여도

□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장 점>

- 대부분의 연구과제들이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의성, 참신성,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등 면에서 우수하며, 특히 향후 국토정책의 큰 방향을 선도하는 안목이 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큰 장점임.
- 정책화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워크숍, 학회와의 연계 발표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임.
- 대안의 정책화 실적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과제들이 입법화 및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과제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법령화 제·개정 작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일부과제의 경우(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 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포용적 국토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연구 등) 그 동안의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의 제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제안들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됨.

<단 점>

- 일부 과제들의 경우 정책수혜대상자 및 정책 주요방안이 차별화됨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 타깃이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것이 발견됨.
-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유사 과제를 수행하는 타 국책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성격이나 내용, 방법론면에서 차별성이 크게 발견되지 않음.
- 일부 연구과제들의 경우 정책효과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수량화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적 효과, 행정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지나치게 추상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연구원의 미션이나 성격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있음.
-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대안들의 실현가능성 특히 정부 예산의 소요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예산 소요 추정이 미흡한 편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개별 과제들의 주요 정책타깃을 연도별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다년간에 걸쳐 제시하는 등 정책대상을 좀 더 명확히 수치화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과제 선정이나 수행방식 면에서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는 타 연구원들과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반영하는 노력에 더하여, 특히 향후 잠재적 정책대상수요자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설계가 필요함.
-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대안들의 집행에 소요되는 정부예산 규모를 동시에 추정하여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함.

1-3-2. 정책집행 기여도

□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장 점>

-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개선사항이 분명하게 제시되었고, 개별 집행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평가시스템과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법정 위원회 개최 지원, 전문위원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성화 등 집행과 환류체계와의 연계성 등이 바람직하게 운용되고 있음.
-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및 NGO 등이 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내외 전문사례 발굴, 적극적인 공론화와 협업 유도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장점임.

<단 점>

- 전반적으로 볼 때, 성과지표 내용이 지나치게 **output** 위주로써 **outcome** 및 **impact**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가령,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지원정책의 성과지표가 '연구 과제 1건 포함 총 2건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건수 위주로 되어 있고, 이 과제의 내용이 어느 정도 내실 있는지, 이 과제가 실제 어떤 사회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적 측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론화의 경우도 일부 사업의 경우 '행사 7종 7건 이상 콘텐츠 발굴 및 제공 1식'으로 되어 있는 바, 행사 7종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행사의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효과를 유발할지 등에 대한 제시가 없음.
-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명백히 제시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세미나 건수, 발간건수 등의 양적지표에 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질적 성격의 지표를 포함시켜서 지수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환류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함. 다양한 고객들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상호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 등 실질적인 측면의 환류시스템 작동이 요망됨.
-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나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음.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명확한 제도 정립이 필요함.

1-4

성과확산

1-4-1. 성과확산 및 네트워크

□ 정책연구 성과 및 정책 확산 노력과 실적

<장 점>

-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연구보고서 배포처 12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배포방법 및 종류, 배포대상 범위 등을 정비함.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수단(매체)을 활용하고 있으며,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기관의 저작물 및 공공데이터 관리 수준 진단 및 전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저작권 교육 강화로 지식자산 보호 노력을 강화함.
- 실무협의회를 다수 개최한 점이 우수함. 100대 국정과제 중 국토, 도시, 지역, 부동산, 인프라, 국토정보분석 등 9개 국정과제에 대해 정부부처와 협업체제를 형성함.
- 체계적인 정책화에 대한 노력이 개별 과제별, 전담 부서별 및 기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짐.
- 국제전문학술지에 12건의 논문을 발간한 점은 연구역량의 고도화 측면에서 우수함.
- 공공데이터포털 및 홈페이지에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 국토정책브리프, 보고서 등 60건의 장보를 공개함.

<단 점>

- 연구성과의 NKIS 등록 실적은 좋으나 일부 성과물의 원문 파일 업로드가 늦어지는 경우가 나타남.
-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연구성과를 홍보·확산하고 있으나 국토종합계획 방향 설정, 도시재생 중간조직 실태 파악 등 일부 내용은 성과를 홍보·확산하기 위한 내용과는 다소 관련성이 미약함.
- 연구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모니터링을 하여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미약함.
- 학술지 발간 실적이 낮아 전반적으로 국토연구원의 학술연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대다수 학술지 게재 연구들이 공동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원 개별 연구를 활

성화 할 필요가 있음.

-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검토 결과 연구원 1인당 게재편수가 타 기관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연구자료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음.
- 연구 원천자료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함.
- 연구 원천자료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제시된 출판관리규칙 등은 다양한 형태의 연구 원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는 관련성이 다소 미약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물의 적시성과 시의성을 위해 NKIS 등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및 공개·개방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검토를 권고함.
- 연구성과의 확산과 정책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은 바람직하나, 연구기관의 예산한계상 이들 중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체계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과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첨단 연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학술지 게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 개인의 논문 게재 역량을 높여 연구원 1인당 게재편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연구물들에 대한 정보공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연구성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대외 신뢰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원천자료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중간 산출물도 연구 원천자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 원천자료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연구 원천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연구기관의 대내외 소통, 협업 및 융·복합

<장 점>

- 국토교통부 등 정부주요기관의 현안 해결을 위해 자문회, 세미나, 토론회, 포럼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함.

- 다양한 정부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 유관부처와 협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기초자료 제공 등의 성과를 달성함.
- 다양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거나 연구 과제를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 각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특성에 맞는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반 강화에 노력함.
- 지역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신규 MOU 체결과 기존 협력기관별 실질적 후속사업 및 연구연계를 통해 MOU 내실화를 추구함.
-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발전전략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단 점>

- 정부 현안 지원을 위해 TF 등을 결성하여 대응의 기민성을 높인 부분이 없음. 국회와 협력 부분이 횡수와 질적인 측면에서 약함.
-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내용 검토 결과 산업계와의 협업·연구 네트워크 운영 실적이 다소 미약하게 나타남.
- 인력교류에 있어 대부분 한 달 미만의 단기적 교류에 그침.
- 전년도 국제공동 협력을 위한 외국수탁연구가 진행 중이나 신규 외국 수탁연구 실적은 나타나있지 않음.
- 국제화 환류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정책을 채택해볼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조체제도 협조결과가 연구과제의 선택이나 협력사업의 실행 등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산업계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화 수준의 모니터링 및 환류는 자체적인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과거수행한 일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과거 수행한 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실제 관련 정책이나 방법상으로 개선해야 함.

- 인바운드(In-bound)형 인력교류에 있어 단기적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장기적 인력교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국 수탁연구 수행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1-4-2. 고객만족도

□ 정부 및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함. 기본연구, 위탁/공동연구, 육성 및 축진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수탁연구가 전년 대비 하락함. 상세업무별로는 위탁/공동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성 및 축진, 기본연구, 수탁연구 순임.
-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기본연구, 위탁/공동연구, 육성 및 축진의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EH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감정만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체평균 대비 높음. 상세업무 유형에서 수탁연구를 제외한 3개 상세업무 유형 모두에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명감 보유’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음. 수탁연구의 경우 ‘고객문의 및 협의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음.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보유’, ‘연구과제의 안내/문의/협의를 위한 담당자 접촉 용이’ 항목의 점수가 높음.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과제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제시’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음. 육성 및 축진의 경우 ‘포럼 및 세미나의 발제자, 토론자를 해당 분야 전문가 구성’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포럼, 세미나 운영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음.
- 업무유형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에서는 고객과 지속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가 활용성을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지속적인지 점검하여야 함. 수행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 연구동향 등의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음.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2-1-1. 리더십 및 책임경영

□ 리더십 및 책임경영 이행 정도

① 경영전략·목표 및 소통·협업

<장 점>

- 당면 현안 중 하나로 연구방법의 확대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과학적 국토정책 연구 수행 기반 강화를 실천계획으로 설정하여 노력함.
- 소통 활성화를 위해 원내의 다양한 직급의 원내 자발적 참여자 20인으로 구성된 발전 기획위원회를 신설함.
- 정부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이 전년 대비 34% 증가하여 많이 강화되었고 활동 내역도 활발함.
- MOU 신규 체결 실적이 양호하고, 기존 체결 MOU 강화 및 내실화하는 협력활동이 양호함.
- 전체연구의 상당 부분을 협동 및 융·복합 연구로 하향식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협동 및 융·복합 연구과제 발굴의 적극성이 우수함.
- 인트라넷을 활용한 댓글 등을 통해 횡적 소통을 촉진하려고 노력한 점이 우수함.
- 과거 30년의 센터별 대내외 활동을 코드화 작업을 거친 후 DB화하여 경영 및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한 점이 탁월함.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전반적으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한 점이 우수함.

<단 점>

- 실천계획 및 실천과제 설정 관련, 특히 연구계획에 있어 경제적, 국내적 시각에만 경

- 도된 경향이 있음. 영토분쟁 가능 지역 관련 연구 등 정치적이고 국제관계적 시각에서 수행되는 국토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전년도들에 비해 2017년에는 성과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로 홍보 차원만 강조된 점이 미흡함.
 - 연구회와의 공동연구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 연구행정 상호기여도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연구행정 선진화 및 조직 운영 유연화’와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함.
 -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제기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하여 구성원 간 소통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는 점은 미흡함.
 - 일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의 활동이 단순 참가에 그친 점을 실적으로 포함한 점은 다소 미흡함.
 -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의 대외활동이 빈도 측면에서 80%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수 사례가 행사 관련 단순 언론보도임을 감안할 때 기관장의 활동이 정책 홍보 극대화에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SWOT 분석과 당면 현안 도출 사이의 관계, 경영목표 이행 과정 관련해 설정한 4단계를 더 보완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PEST 분석, 확대간부회의 등).
-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활동 실적 가운데 기사 31건 중에는 기사에 연구기관이나 기관장이 단순 인용된 것도 많음. 기관 및 기관장을 중심으로 비중도 크게 다룬 기사만 포함시키는 것이 정확함.
- 연구행정 상호기여도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직원을 선정한 후 그 결과가 근무평정 결과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직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수연구원에 대한 포상과 저성과자 역량강화 노력이 병행된 점은 적절하나, 양 극단의 인력에 대한 관리가 연구기관의 전체 역량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원장-구성원, 구성원-구성원 간 소통 정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노력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수립한 홍보 전략의 수립-추진 등과 아울러 환류 및 개선 등을 강조하여 연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임.
- 구성원 간 소통 제고의 한 방안으로서 ‘기관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팀의 구성 변화, 현안 업무의 대응 팀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TF 팀 구성의 다양화(부서간, 직급간, 연구-행

정간 혼합)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② 책임경영

<장 점>

- 경영목표 및 실천계획에 조응하는 다양한 연구와 사업이 이루어졌음.
- 통일 대비 세부 주제별 심화된 국토연구가 수행되고 이와 연계해 한반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이 연구됨.
-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 확대 방안 연구는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국립중앙도서관, 세종도서관 등 유관 도서관 및 정부부처와 정보 협조체계를 강화하였음.
- 여성가족부의 미래여성인재양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장관상을 수상함.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돋보임.
- 지난 수년간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규정 마련과 강화 노력을 꾸준히 수행해온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연구윤리 위반자(표절의 경미한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후속조치가 우수함.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교육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짐.
- 배포된 보도자료의 과제별 언론보도실적을 모니터링 분석하는 등 보도자료 콘테스트를 강화하여 연구성과 홍보를 강조한 점이 우수함.
- 기관경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의 노력이 우수함.
- 여성가족부 미래여성인재양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은 우수함.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우수함.
- 세종시 이전 후 예산과 연구를 결합한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한 점이 우수함.

<단 점>

- 경영목표 실천계획별 달성도가 모든 실천과제에 있어 일괄적으로 100%로 자체평가하고 있는데, 목표와 달성도를 지나치게 단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정성적 평가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 달성도로 설정해둔 목표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도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강화의 성과목표지표로서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만족도 점수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계량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지속’을 제시한 점이 미흡함.

- 청사이전 종합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의 실천계획 성과목표로 제시한 ‘직원이주 및 정착지원’, ‘청사환경 및 불편사항 개선’ 등에 있어서 ‘노력한 결과의 개선 정도’로 성과 목표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였다’로 설정한 점 등 지표 설정의 적절성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본 평가는 2017년도 실적 평가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연도별 달성도 목표치에 있어서 특히 2015년도 달성도와 2016년도 달성도의 차이가 매우 큰 과제들이 있는데, 이 달성도 설정에 관해 보완 설명이 필요함.
-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의 성과목표지표로서 실시한 온라인 만족도 조사결과가 환류되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있으나 환류의 효과성이 제고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업무우수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가의 공정성 및 구성원의 수용성인 바, 연구행정 상호기여도 평가를 추진한 후 해당 평가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 미래여성인재양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은 우수하나, 여성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미래여성인재양성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③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정부의 부동산정책 지원 및 대국민 소통 강화

<장 점>

- 다수의 연구결과 발표 기회가 마련됨.
- DTI 변경내용 등을 비롯하여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대책 차별화 전략 연구지원이 이루어짐.
- 투기 대상 지역 동향 분석 자료 제공 등 정책지원이 이루어짐.
- 2016년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노력이 이루어짐.
- ETRI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하여 연구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노력이 다양하며 다수 존재함.
- 부동산 가격시장 변동 기사배포, 인포그래픽스 작성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연구실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됨.
- 부동산 연구원소식지 내용을 코드화 분류를 통해 체계화 하는 등 내부적 분석 활용을

- 위한 노력이 타 기관과 차별화됨.
- 기관고유사업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 확대를 통한 정책환류체계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이의 실현을 위한 중점추진사업 선정의 당위성이 인정됨.
- 정부의 부동산정책 지원과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본부장, 센터장 연석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사업 후보군을 선별하여 논의한 후 사업을 선정하고, 본부장, 센터장 연석회의에서 선정된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토론한 후 연구원 내외 협업 및 융·복합 성과를 확인하며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투입하는 등 추진전략의 체계성이 양호함.
-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대책, 11.29주거복지로드맵, 정책지원리포트 52건 작성, 국토정책브리프 3건 작성 배포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지원 역할이 양호함. 부동산정책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 협의를 하는 등 유관부처와 협력 실적이 인정됨.
- 국가적 주요정책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관련 자체연구과제 3건 및 수탁과제 6건을 수행하고,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국회 등과 지속적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인공지능기술기반 인구 및 주택시장 시뮬레이션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주택시장예측모형 개발을 위해 전자통신연구원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토정책연구에 첨단신기술과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함.

<단 점>

- 시장 현황과 연구결과의 매칭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중점추진사업 선정 프로세스 측면에서 본부장, 센터장 연석회의, 확대간부회의를 중심으로 중점추진사업 후보군을 선별하고 집중논의한 후 최종 3개의 추진사업을 선정하였으나 부서별 전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부서장 및 원내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과제 압축, 최종 과제 선정의 단계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전사적 노력을 가동하는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쉬움.
- 주거복지포럼, 주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주택학회, 부동산분석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고,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체코, 캐나다, 미국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보고하고 있으나 국내외 교류 협력의 지속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총 3개의 국토정책브리프가 언론에 노출되고, 매월 작성되는 소비자 심리조사결과가 KBS 등 언론에 노출되었으나, 과거에 비하여 타 민간연구기관에 비하여 국토연구원이 부동산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스타플레이어가 부족한 점이 다소 아쉬움.

<개선 및 건의사항>

-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나 반응정도가 다소 낮은 경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에 기반한 국토/부동산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제시 및 반응형 수정 제시 노력이 필요함.
- 관련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등 DB 축적 노력 있으며, 향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기대됨.
- 전반적인 정부정책수행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노력이 인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고 부동산 관련 국민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본 중점추진사업과 관련한 성과에 관하여 유보적 평가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공급측면의 접근 등 보다 근본적인 다각도의 정책지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함.
- 3개의 국토정책브리프, 1회의 기자간담회, 변세일 박사의 지역방송 및 케이블방송채널 출연 등 부동산 정책 관련 홍보 노력이 인정되나, 중앙언론사를 표적청중으로 하여 보다 파급력 높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2)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지원 기능 강화

<장 점>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위상을 고려하여 본 추진사업과제를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부의 부동산정책 지원과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본부장, 센터장 연석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사업 후보군을 선별하여 논의한 후 사업을 선정하고, 본부장, 센터장 연석회의에서 선정된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토론한 후 연구원 내외 협업 및 융·복합 성과를 확인하며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투입하는 등 추진전략의 체계성이 양호함.
- 국정과제로 도시재생정책이 채택됨에 따라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등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등 관련 정책의 지원기구로 공식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평가를 하는 등 국가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이 인정됨.
- 새정부 중점추진과제인 본 과제의 국가로드맵 제작에 집중하였음.
- 재생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끔 가이드라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치 포럼 구성 및 간사기관 활동 노력이 인정됨.
- 협동 및 융복합연구를 강조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6~7개 기관과 협동연구를 추진한 바 있음.
- 도시재생 뉴딜 국가 로드맵을 주관하여 작성하고 법 개정안도 작성하였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및 시행 가이드라인을 주관하여 작성하였으며, 전국 시도연구원 및 관련 학회의 도시재생 전문가와의 교류협력 노력이 인정됨.
-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협의회,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개최, 명사초대석 개최 등 도시재생 추진 관련 어젠다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인정되고, 세계도시정보 웹사이트 내 도시재생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제공 등 국내외 정보 공유 및 확산 노력이 인정됨.

<단 점>

- 상반기 중앙기관과의 협치가 다소 미흡하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치포럼 발족 노력 등을 통해 상반기의 미흡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바는 인정됨.
-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채택되고 실제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나, 현재 구체적 성과 및 연구-정책 간 연계성은 다소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도시재생 현장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간담회 개최 등 노력이 인정되나 연구기관 내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융·복합 연구 노력을 강화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정도의 증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도시재생 관련 포럼 등 도시재생 네트워크 개최 및 명사초대석 개최 노력이 양호하나 콘텐츠를 TV 정책방송채널, 중앙언론사, 웹캐스트, 모바일 채널 등 다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청중에게 노출하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수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민생과의 연계성, 국정운영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점에 비추어 기관의 지속적 중점 추진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교류 및 의견확산 효과성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국회포럼, 도시재생 전략 포럼, 중앙부처 협치포럼 등 다양한 통로의 유지 및 결과 활용이 필요함.

- 도시재생 현장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간담회 개최 등 노력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나 연구기관 내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융·복합 연구 노력을 강화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정도를 배가하고, 자료구축 및 정보의 공유노력을 더욱 증진할 것을 권고함.
- 부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업무협력 협약, 서울주택공사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MOU 체결 이후 보다 실제있는 협업 노력을 강화하여 국민체감과 실효성 높은 정책지원을 수행할 것을 권고함.

(3) 스마트시티 정책지원 강화

<장 점>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스마트시티 로드맵 수립과 범부처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연계하는 등 스마트시티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선정 및 수행체계의 적절성이 인정됨.
- 해외에서 국내 최초 글로벌스마트시티 위크를 개최하고 과기부와 정통부 협동행사를 추진하였으며, 8-9개 프로그램을 주관함.
- 해외사례 및 국내실패 조성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내용을 구성함.
- 본부장, 센터장 연석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사업 후보군을 선별하여 논의한 후 사업을 선정하고, 본부장, 센터장 연석회의에서 선정된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토론한 후 연구원 내외 협업 및 융복합 성과를 확인하며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투입하는 등 추진전략의 체계성이 양호함.
- 기술 및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성 등 분야별로 국내 스마트시티의 역량 수준을 진단, 측정할 수 있는 인증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도시 인증제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범인증을 추진하기로 확정되는 등 실적이 인정됨.

<단 점>

- 스마트시티는 과거 유비쿼터스와의 연결성이 있는 주제이므로 이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또 다시 새로운 주제가 대두되었을 때를 대비한 미래적 헤안이 필요함.
- 스마트시티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산하 특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청와대, 국회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한 노력

과, 미주개발은행과의 공동컨설팅 수행, 세계은행과의 워크숍 등 교류협력 노력이 인정되나, 스마트시티 추진이 앞선 선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노력이 국내교류협력 노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쉬움.

<개선 및 건의사항>

- 스마트시티 구축은 중앙정부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통로 확대가 필요함.
- 스티븐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는 거버넌스와 기술 이슈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과제로, 미시건주처럼 민간기업, 대학, 주 정부가 힘을 합쳐 긴밀히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에 있어 국내외 교류협력을 더욱 증진할 것을 권고함.
- 로드맵 핵심방향이 건설 및 인프라 구축 위주인데 이를 해외스마트시티처럼 거버넌스와 혁신성 위주로 변경하는 등 방향성 전환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에 있어 국토연구원의 주도적 역할이 인정되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그 정책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다양한 관련 주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정책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

2-2 스마트 경영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조직·인사 및 보안관리

①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 노력 및 성과

<장 점>

- 정책연구기획 TF, 연구기획평가팀, 정책포럼 및 워크숍 등을 운영하면서 국정과제 발굴과 지원, 현안이슈 대응 강화 및 정책수요자의 의견수렴,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 등을 추진한 점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긍정적인 조직운영 노력으로 평가됨.
- 열린소리함 등 온·오프라인 직원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한 점은 내부 고객요구에 부응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운영실적으로 평가됨.
- 연구원 소식지의 전산화로 DB화하여 경영의사결정 및 연구에 기여하도록 노력함.

- 고객 니즈를 파악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윈스톱(one-stop)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함.
-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TF를 가동하고 신규과제 발굴(예:도시재생, 스마트시티구축 관련)에도 적절히 대처한 노력이 인정됨.
- 또 청사이전이후 직원들 조기정착을 위한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였는데, 특히 연구원 소식지를 전산화(DB화)하여 소통 및 경영관리에 혁신을 추진한 노력이 인정됨.
- 내부적으로는 위촉직 연구원들의 고용불안해소 및 임금인상이나 소통을 활성화 한 것이나 정보인프라 확충 등도 적절한 조치이고 외부적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도 무난하게 운용, 채용시스템 개선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수요 전망 및 인력구조 중장기 분석을 고려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인력운용계획을 기획하고 인재를 채용한 노력은 인정됨.
- 2016년 대비 2017년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인재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하여 지역 우수인력 확보 노력 및 실적이 인정됨.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위원 인력풀을 운영하여 외부면접위원의 참여를 활성화 함.
- 향후 10년간 퇴직분야를 예측하고 동시에 필요수요인력을 예측하는 체계가 인정됨.
- 연구직/비연구직의 채용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우수인력채용의 원천을 국내외로 확대하고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도 인정됨.

<단 점>

- 연구수요조사, 정기간행물 만족도조사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정책수요자에 집중이 되어 있어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세부실천목표 설정, 부서별 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계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적극적 모니터링, 실효적 환류체계 구축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성과관리 체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조직성과관리를 위하여 계획부터 환류에 이르는 종합체계도 구축이 부족하고 경영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객관적 측정지표가 미흡함.
- 채용 시 면접전형위원 중 외부면접위원 비중(7명 중 2명)이 다소 낮아 채용의 공정성 제고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인력 풀 구축 등과 같이 박사급 신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차별적인 노력이 부족함.
- 청년고용실적이 정부권장기준을 하회하여 청년고용 실적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기관 인재상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인재상간 중복(중첩)성이 있어 인재상의 명료화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구축을 건의함.
- 계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적극적 모니터링, 실효적 환류체계 구축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천목표의 달성 여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평가지표)의 계량화를 권고함.
- 조직성과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운영체계(기획부터 환류까지) 개발 및 경영목표와 세부실천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KPI 개발이 필요함.
- 채용 시 면접전형위원 중 외부면접위원 비중을 높일 것을 건의함.
- 인력 풀 구축 등과 같이 박사급 신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함.
- 기관의 인재상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인재상간 중복(중첩)성이 있어 인재상의 명료화와 핵심역량과 핵심역량 해설이 연결되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② 역량개발, 인사관리 개선 및 노사화합

<장 점>

- 기관의 비전, 경영목표, 인재상 및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중장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경력단계별, 직책별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 점이 인정됨.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결과 후 만족도 조사(연 2회)를 실시하고 차년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기관의 경영목표-핵심역량-인재상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임.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나름의 시스템운영이 인정됨.
- 경력단계별/직종별 세부계획운영도 적정함.
- 우수보고서 홈페이지 게재홍보도 적절한 사기진작책임.
- 연구직과 행정직 상호간 서비스 만족도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한 점은 협력적 조직문화구축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동기부여 요인이며 수범사항임.
- 직무역량평가에서 상호평가 및 교차평가 등 다면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점은 업적평가체도의 합리성 제고 노력으로 판단됨.
- 비연구직 업적평가에서 평가지표의 계량화 비율(70%)이 다소 높은 점은 업적평가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됨.
- 업적평가제도개선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업적평가의 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음.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업적평가체계가 직급별로 차별화되어 있음.
- KHRIS 소통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한 노력이 인정됨.
-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고충처리운영 실적도 양호한 점이 인정됨.

-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연구직과 행정직 상호 간 서비스 만족도 우수직원 포상 등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노사간 의사소통 활성화 실적을 높게 창출한 점이 인정됨.
- 3개의 복수노조임에도 노사협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 3개의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별 분쟁이나 갈등없이 단협없이 임협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노사협력 증진의 큰 성과임.
- 2017년에는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실적이 인정되고 특히 2016년까지 운영되지 않았던 노사협의회를 가동하였고 고충처리 노력도 인정됨.

<단 점>

- 2016년 대비 2017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총교육훈련비, 1인당 교육훈련비가 감소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집행 실적이 부족함.
- 유연근무제 운영이 시차출퇴근제 및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만 되어 있어 다양한 유연근무제 운영 및 활성화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안식년 후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가 미흡하고 연구업적물의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서적발간 의무 규정이 없어 안식년제 사후관리의 엄밀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유연근무제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반영이 미흡하고, 노조와의 합의부재로 유연근무제 근태관리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역량기반(공통역량/직무역량/리더십역량)의 인력자원개발이 필요한데 현재의 핵심역량에 의한 접근은 역량강화 관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짐.
- 2016년도 대비 연구직 평가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실적이 미흡하여 업적평가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기관의 연구환경 및 인적 구성이 융·복합 협동연구 체제와 긴밀함에도 불구하고 융·복합 연구 활성화 노력이 부족함.
- 2017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14건)가 다소 높아 업적평가시스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위촉연구원의 평가방식에서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로 변경하려는 노력이 노사합의 부재로 시행되지 못함.
- 연구직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연구에 대한 실적이 미진함.
-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노사협력증진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노사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노무관리 담당자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노사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노력이 현저히 부족(연3회)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안식년 후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업적물의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서적발간 의무 규정을 통해 안식년제 사후관리의 엄밀성을 제고시킬 것을 건의함.
- 유연근무제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도입 노력이 필요하고, 유연근무제 근태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에 명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 역량기반(공통역량/직무역량/리더십역량)의 HRD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함.
-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건의함.
- 업적평가시스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시스템 검토를 건의함.
- 위촉연구원의 평가방식에서 정성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가방식을 정량평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연구직의 융합 및 복합연구 활성화 및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보완을 권고함.
-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노사협력증진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건의함.
- 노무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무관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실적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
-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종합발전체계를 구성하길 권고함.
- 노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무관리담당자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함(최소 월1회).

③ 정보보안 관리 수준

<장 점>

- 국무조정실의 정보보안기본지침에 근거하여 2017년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음.
-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안 예산 집행액이 약 26%로 평가기준을 충족함.
-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기관 내 개인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기 반입 금지,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의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함.
-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해킹메일 대응 훈련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훈련을 이행하였음.
-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의 침해사고(시도) 처리요청에 24시간 이내 대응하고 있음.
- 보안성 검토 및 보안대책 시행, 용역업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교육,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용역사업 보안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히 이행하였음.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이행, 사이버위기대응 매뉴얼 보유
-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최소한 수집 노력이 우수함.

<단 점>

- 정보보안 담당인력의 자격기준이나 전문성은 충족하지만, 정보보안 전담인력이 없으며 임직원 수 300명 이상 충족기준인 정보보안 전담인력 3명의 기준에 미흡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나, 3회 합산 참석률이 약 27%로 평가기준에 미흡함.
- 망분리 미실시, 정보보안 전담 인력 미배치, 기관메일 보안관리 미흡, 재택근무 보안관리 소홀,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미실시(2단계인증(OTP, 인증서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외부접속 허용)
- 기준일 당시 ‘개인정보보호의 날’ 미지정 및 미시행, 위규자에 대한 조치기준 미마련, 메인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연락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미현행화, ‘상상대로’ 홈페이지 회원로그인 비밀번호 전송 시 미암호화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정보보안 전담인력 3명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지만, 기관 규모나 업무를 고려할 때 정보보안 전담인력의 추가적인 충원을 적극 권고함.
- 정보보안교육 참석률이 타 기관 대비 현저히 저조함에 따라 향후 보안교육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적극 권고함. 특히 보안교육 등은 기관경영진의 관심에 따라 급속히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2-2. 보수 및 예산운용

□ 보수체계 및 예산운용

① 총인건비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 2016년 대비 2017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은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결산잉여금(6,152백만원)은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과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하고, 차기 이월되었음.
-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은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보수제도의 합리성

<장 점>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율 등 제도도입 및 규정 개정 등이 연구회 지침 및 정부 권고안에 따라 모두 완료되었음.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연구과제 수행 및 신규직원 멘토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설계함.
- 신규 채용 대상자 2명 채용을 조기에(5월 2일자) 완료하였음.
- 향후 신규채용자의 소요재원은 임금피크 대상자 임금절감분 및 인건비 집행 잔액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하였음.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교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 제 규정들은 대부분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등 적정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음.
- 복무 및 인사관리 규정에서 휴가 및 휴직제도 등이 모두 정부기준 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단 점>

- 퇴직자를 당연히 2년간 우대하는 연구원 공로자 우대제도의 규정을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적정하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연구직 행정직 모두 퇴직 이후 연구원공로자를 신청하면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피크제 기간의 업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등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운용의 혁신

<장 점>

-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정부과제 및 기초연구과제의 비중 및 연구사업비 예산의 편성은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
- 중점 연구사업비 예산편성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 과제를 선정하고 집행비율도 9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연구사업비 예산의 집행비율은 93%이고 연구개발적립금 예산 집행비율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수시연구사업비는 집행비율이 9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중점연구사업비, 수시연구사업비 등 모든 사업비 집행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매주 연구사업비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 하고 매월 간부회의에서 본부 및 센터별 집행 실적을 점검함.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예산운용 현황 공개 및 관련 제도 활용 및 제 규정을 준수하였음.
- 예산운용 혁신을 위해 예산 모니터링 강화 및 사업비용 기준 등을 정비하고 항공권 구매수수료 절감 및 복사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단 점>

- 수시연구 사업비는 2016년 12월 10%로 편성하였으나, 기본연구사업 이월예산 및 의무적립금(환수금) 추가로 인해 규모가 27.5%로 연구회의 지침기준(10%)을 초과하여 편성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사업비 예산이 초과편성된 것은 이월예산 등이 있어 발생한 것이지만 향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정 등을 통하여 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 필요함.
- 수시연구사업의 외부위탁 용역에 관련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외부위탁과 관련한 체계적인 심의절차를 마련할 것이 필요함.

2-3

공공성 및 책무성

2-3-1. 사회적 포용

□ 사회적 포용의 이행 정도

① 사회적 고용(장애인, 국가유공자)

<장 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4차례의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천을 의뢰하여 중증장애인 3명을 신규채용(근무중 장애판정 1명 포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비율이 전년 대비 0.3% 상승하였음.
- 직원채용규칙 제19조 및 위촉직 운영지침 제5조의 3에 장애인 임용 우대조항을, 직원채용규칙 제19조 및 위촉직 운영지침 제5조의 3에 국가유공자 임용 우대조항을 두고 있음.
- 충남동부보훈지청에 3회에 걸쳐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채용 추천의뢰가 이루어졌으며 위촉직 연구원 2명을 신규채용한 실적이 있음.

<단 점>

- 상시고용인력 3,529명 중 장애인 96명 고용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70%(6개월 달성)로 정부권장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일부 준수함.
- 장애인기업물품 구매 실적은 외부구입총액 대비 1.47%(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전체의 0.73%)으로 타 기관 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년도의 6.48%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함.
- 기관 총원 273명 대비 국가유공자 13명 고용으로, 국가유공자 고용률은 5.3%로 정부권장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6.0%를 일부 준수함.
- 국가유공자를 우선채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 개발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월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시적으로 정부권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력운용계획의 수립과 고용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신규채용된 장애인 3인 중 2인이 청년인턴에 해당됨으로써 인턴과정 종료 후 재고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연구전문직뿐 아니라 행정직 및 청년인턴 등 채용의 전 분야에 걸쳐 장애인을 우대하는 특별전형이나 제한경쟁채용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신청사 건축 공사비 포함으로 일시적으로 장애기업물품 구입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지속적인 물품구입비율 유지를 위해 인쇄 및 사무용품 등 광범위한 MRO 제품군으로 장애인기업 구입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신청사에 장애인바리스타 카페를 유치하는 등 장애인 간접 고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권장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국가유공자 제한 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한시적으로 우대가점을 상향(10% 등)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됨.
- 국가유공자의 고용 풀 분석을 통해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연구 및 행정직 전반에 걸쳐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채용을 통해 적극적인 리크루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② 휴가 및 일·가정 양립지원

<장 점>

- 연가저축제는 미도입하였으나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가저축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임.
-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2항에 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5일, 유급)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6명, 배우자 출산휴가 3명의 활용 실적이 있음.
- 인사관리규정 제27조의 7호 및 제27조의 2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12명(배우자 2명 포함) 활용 실적이 있음.
- 인사운영 시행지침 제27조 10호에 가족돌봄휴직을, 제26조의 3에 임신근로자 단축근무를, 복무규정 제26조의 3항에 여성보건휴가 및 태아 검진시간 청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태아검진시간 청구 5명, 임신근로자 단축근무 3명의 활용실적이 있음.
- 재난구호휴가 및 난산휴가, 유사산자녀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하였고(17. 12. 1.), 여성인재 양성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실적이 있음.(17. 12. 7.)

<단 점>

- 연차휴가 소진율은 100%(등록 기준)이나 실소진율은 80~90% 수준이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연간 2회만 실시하는 등 촉진 활동이 미흡함.
-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은 3년인데 반해 남성은 1년으로 규정되어 육아활동지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등록제에 따르면 연차휴가가 전체 소진되고 있으나 실소진율과 차이가 있는 바, 실소진율을 중심으로 연가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초에 부서별로 연차휴가계획을 수립하고 소진현황을 주기적(분기별 또는 월별)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③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고용 개선

<장 점>

- 청년인턴은 배정인원 11명 대비 18명(연구 6명, 행정 12명)을 채용하였음.
- 청년인턴에게 지도멘토와 감성멘토 2인을 배정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빅데이터 통계시각화교육, 관련법률(국토계획법 등) 교육 등 국토연구원에 특화된 인턴교육을 실시하였음.
- 인턴 업무 종료 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인턴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에 ‘우수’ 여부를 기재하고 있으며, 위촉직 공개채용 시 내부 인턴에 대해 가점(서류전형 3%)을 부여하는 우대조치를 명문화하고 있음.
- 청년인턴 재직자 중, 2017년 행정직(3급 관리원) 공개채용을 통해 1명을 채용한 실적이 있음.
- 2017년 용역근로자 24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실적이 있음.
- 위촉직 운용지침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위촉직에 대해 고용기간 중 정규직 수습직원과 동일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규직 수준의 복리후생을 적용하고 있음.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위촉직원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단위로 고용계약을 하고 정부인상분 이외 자체인상분을 반영하여 위촉직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단 점>

- 인턴 수료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근무평정 결과와 세부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 임금수준에 있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79~86%,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2~86% 수준으로 임금수준에 차이가 발생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역할에 따른 차이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임금수준상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

갈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청년인턴에 대해 취업역량 및 업무역량 교육을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와 행정직을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 인턴수료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우수자의 경우 추후 공개채용이나 계약연장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고용형태별로 직무트랙이 상이하게 관리되는 바,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와 역할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한 연봉 및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함.

2-3-2.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정도

□ 내·외부 감사결과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① 내·외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절차와 통제에 대한 ‘복무규정’ 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규정’ 및 ‘직원대외활동 기준’ 을 제정해서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함으로써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음.
- 외부전문가 활용부실(원고 미등재, 표절, 원고분량 미달 등) 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 지침(2017.8.10.)을 제정 및 시행하였음.
- 감사실에 감사인력 2인을 배치하고, 감사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온·오프라인 등의 감사전담교육에 참여하였음.
- 감사인의 임면과 인사이동 및 근무평가 시 기관장이 비상임감사와 사전 협의하는 등 감사부서장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관장과 비상임감사의 업무협의를 정례화하였으며, 비상임 감사 임회하에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임감사의 역할을 활성화하였음.
- 법인카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인카드 승인내역 통보 시기를 단축하는 등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자체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프로세스 및 환류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단 점>

-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기관의 개선 실적이 명확하지 않음.
- 감사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의 횟수가 2회로 타 기관들에 비해 적으며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치우쳐 있음.
- 감사인에 대한 독립성과 관련한 부분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이라고 규정되어있기는 하나, 평가 등의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규정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감사의 공통지적사항 중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감사인의 인사이동과 근무평가에 대한 우대 조항을 명문화하여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높일 것을 권고함.
- 감사교육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횟수를 늘리고, 청탁금지법 외에 교육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감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간부들과 공유되고 있음.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들을 전 직원들과 공유할 것을 권고함.
- 감사인의 독립성 관련한 규정을 입면, 평가, 부서이동 등의 측면에 있어서 보다 세밀화 할 필요가 있음.

②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실적 및 환류

<장 점>

- 세부과제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와 성과 모니터링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등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자체 개선계획 이행을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음.
- 용역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적자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임.
- 복수노조 체제에서 고충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관장의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단 점>

- 연구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심사비 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논문 게재 장려를 위한 제도도입 및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전년도 지적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음.
-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증대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기재부 등 유관부처 참여 및 협력확대라는 실적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판단이 어려움.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과 재무예산 계획 등의 긴밀하고 체계적인 연계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으로 처우개선 및 승진인사에 재정 요건을 고려했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인력수급과 처우개선/승진인사와의 관계성이 미약함.
- 우수인력 채용관련 노력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연4회 공채를 실시한 것을 실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우수인력 채용과 연4회 공채 실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해외 연구기관과 인력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협동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함.